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류진석

(충남대학교)

[요약]

이 연구는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려는 실증연구이다. 복지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복지태도의 결정모델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위에 의한 설명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기반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학습되거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복지태도의 구성범주를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제정의 확충이라는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조작화하여 분석한 결과, 복지친화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은 명확하게 현실화되지 않고, 오히려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은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복지규범 및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구복지국가의 대중적 지지와 복지호름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사회적 지위기반에 따른 '균열명제(cleavages thesis)'의 현실적합성이 유효하지 않은 이유는 복지기능의 도덕적 의무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지위기반의 영향력보다 우선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 복지제도를 둘러싼 자기이해관계(self-interests)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결과 또는 복지정치의 제도적 기반약화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주제어: 복지태도, 사회경제적 지위, 복지이해관계, 복지순응성

1. 서론

이 연구는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그 특성을 규명하려는 실증연구이다. 국가복지의 친화성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는 복지의 정당화 논거를 심화시키는 사회복지학의 중요한 연구주제중 하나로서, 복지국가 또는 복지정책의 정당성 위기라는 이슈와 관련되면서 전개되어왔다. 복지제도의 사회환경적 조건이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고 경쟁가치에 대한 선호, 개인주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41-B00328).

의의 심화 등 복지권의 신장에 제약을 가하는 외부환경의 도전에 직면하여, 복지의 정당성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복지의 확립과정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이해관계자집단(stakeholders)의 의견표출과 대립, 즉 건강보험의 통합과정, 국민연금의 확대과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정 등에서 이를 둘러싼 제반 사회세력들간의 갈등과 논란은 복지의 기능적 규범차원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기반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더구나 경제위기와 정에서 심화된 소득불평등의 문제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현상이 사회의 제반부문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고 계층체제의 공고화로 인해 사회통합과 연대성의 실현이라는 핵심과제가 사회적 의제의 뒷전으로 밀려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정책의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화된 연대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복지에 대한 정치적 지지기반의 확대는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는 바로 이러한 작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복지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복지친화적 태도는 복지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조건이라 할 수 있다. 개인들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조건을 이론적, 경험적인 차원에서 논증할 중요한 소재임에 틀림없다. 특히 복지태도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복지제도의 형태와 내용을 계획하는데 복지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지제도의 정당성은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우호적, 지지적 태도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정치적 행위 및 의사결정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근거를 경험적인 차원에서 확인해 줄 수 있다. 국가복지의 정당성 내지 복지프로그램은 국민여론과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화된 현상이다.

그동안 복지국가의 발전·쇠퇴와 재편 등과 같은 거시적인 연구 못지않게, 개인들의 복지태도에 대한 다수의 연구는 국가복지의 지속가능성 및 복지정치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복지제도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원천, 복지제도의 실천과 내용에 대한 평가, 복지제도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등 복지제도의 미래예측가능성 및 복지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복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집단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복지에 대한 이해관계의 양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표출되고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작업이 요청된다.

다른 한편, 복지태도의 연구와 관련하여 이론적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론적 논의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첫 번째 쟁점은 무엇보다도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모델이다. 지금까지 복지태도 또는 복지의식에 관한 국내 기존연구의 경향은 계급간 복지의식의 비교(안치민, 1995; 김영란, 1995; 우아영, 2000; 조돈문, 2001; 이성균, 2002), 이념형적 복지의식 연구(김상균·정원오, 1995; 이인재, 1998), 복지의식의 특징으로서 이중성(최규·류진석, 2000) 등으로 대별할 수 있고, 복지정치의 메커니즘으로서 복지지위모델의 이론적·경험적 검토(안상훈, 2000) 등이 존

재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계급위치, 복지지위, 또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중심별로 복지태도나 복지태도의 차이를 규명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기존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복지태도의 분석모델은 그 자체로 유용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결국 개인들의 사회적 기반과 복지태도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모델의 한계는 사회적 지위기반과는 다르게 사회적 가치와 지향이 어떤 지점에 있는가에 따라 또는 가치지향과 규범에 대한 사회화과정의 차이로 인하여 복지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포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의 쟁점은 복지태도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복지태도의 전체 양상과 복지태도의 하위영역별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복지태도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특징과 실천적 함의는 무엇인가, 반대로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이 약화되어 나타난다면, 복지국가의 지지에 관한 많은 외국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균열명제(cleavages thesis)’의 현실적합성이 유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의 경험적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전제하에서 출발한다. 즉, 개인들의 사회적 지위기반이라는 이해관계와 국가복지의 규범적 순응성 및 가치지향간의 관계에 따라 국가복지의 친화성정도가 결정된다는 기본전제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국가복지에 대한 이중적 태도, 즉 국가복지의 규범적 순응성 및 가치지향과 국가복지에 대한 개인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이해관계간의 긴장이 국가복지에 대한 친화성과 수용정도에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는가를 중심으로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시각은 기존 연구의 분석모델이 취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기반에 의해 복지태도가 결정된다는 단선론적 결정모델보다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를 분석하는데 보다 유용한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지태도의 다차원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복지태도간의 관계,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과 복지태도간의 관계 등을 기초로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첫째, 복지태도의 경향성 및 복지태도의 하위영역별 경향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복지이해관계자에 따라 복지태도의 차이가 있으며, 분화가능성이 나타나는가? 셋째, 복지규범의 순응성 및 가치규범과 복지태도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복지규범의 순응성 및 가치규범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및 특성은 무엇인가? 등을 논의의 초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복지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복지태도의 개념 및 구성범주

(1) 복지태도의 개념

사회복지가 초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경제적 기반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구조물이라 할 때, 그 내용과 특성은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에 대한 기본인식이 집합적 형태로 내면화되고 행동지향의 의미를 지닐 때, 복지범위의 선택, 정책형태 및 내용, 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제도의 지속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복지태도는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관적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태도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선호여부의 반응이라 할 수 있으며, 신념체계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Rokeach의 신념체계이론(belief system theory)에 따르면, 태도란 특정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선호하는 지속적인 신념으로서, 신념체계의 하위체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Rokeach, 1980). 이러한 태도의 정의에는 첫째, 일시적인 선호를 나타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속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즉, 태도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존하는 가치나 자아개념과 일관성 있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태도는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태도는 인지적, 선호적, 행위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신념의 하위체계로서, 특정대상과 상황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 또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선호여부를 태도로 정의한다면, 복지태도는 복지의 제반 내용에 대한 선호여부의 반응을 의미한다. 복지비용과 조세문제, 소득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 제반 복지의 내용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복지태도라고 규정한 Taylor-Gooby(1985)의 논의 역시 복지에 대한 선호여부의 반응과 관련된다. 따라서 복지태도란 복지제도를 둘러싼 쟁점이나 사회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 인식 또는 부정적인 인식의 학습된 경향을 말한다. 복지발전과 관련하여 주관적 평가기준인 복지태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복지에 대한 가치, 신념, 행동지향 등을 의미한다. 한편, 김상균·정원오(1995)는 복지태도라는 용어를 직접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개념인 사회복지의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사회복지의식이란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복지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제도 혹은 사회복지체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가치지향이나 태도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김상균·정원오, 1995).

이상과 같은 복지태도의 정의는 대상, 주체, 구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복지태도는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서부터 복지비용, 복지제도의 정당성, 복지프로그램의 선호 및 지속여부 등 사회복지체계의 구성적 특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주체로는 복지를 바라보는 인식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 또는 정치엘리트, 관료,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집단의 복지태도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주체별로 복지태도는 분화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셋째, 구성면에서는 가치, 태도, 행동지향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복지태도는 가치지향성과 인간의 행위와 연결되는 행동성향이라는 개념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태도는 사회구성원의 사회경제적 기반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복지규범 및 분배정의 등과 같은 가치지향에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들 간의 관계의 총합을 통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복지태도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사회복지에 대한 규범적 지향성을 통해 복지의 책임주체 및 복지기능의 정당성, 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등에 대한 인식으로 구체화되고 실천의지와 상호결합을 통해 형성되고 학습된 경향을 말한다.

따라서 복지태도의 특성은 첫째, 사회복지의 상황과 문제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둘째, 사회복지제도의 결정이나 문제해결에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며, 셋째, 개인적 성격보다는 집단적인 성격을 띠며, 넷째,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전승되는 특성을 지니면서 사회복지발달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복지태도의 구성범주

복지태도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복지제도의 형태와 내용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복지태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지제도의 정당성은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우호적, 지지적 태도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한다. 태도라는 것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선호여부의 반응이기 때문에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인식주체나 사회적 맥락에 의해 상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복지태도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과거의 지속적인 경험과 사회적 학습의 결과로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기준이 되며, 복지태도 역시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변동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상황중속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복지태도는 정치적 성향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복지태도는 하위영역별 또는 구성범주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복지태도의 구성범주는 복지태도의 정의 및 측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복지태도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태도란 복지의 제반 내용에 대한 선호여부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Taylor-Gooby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여부, 복지비용의 문제, 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 내지 사회적 태도를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라고 규정한다(Taylor-Gooby, 1985). 이러한 개념에 근거한다면, 복지태도는 복지의 원리 및 내용을 중심으로 다차원적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분석자료의 성격이나 조사항목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지만, 이 점에 대해 상당히 소홀히 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 논의의 복지태도나 복지의식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복지수급 대상집단에 대한 국가책임지도(이인재, 1998; 이성균, 2002), 소득평등화의 기대정도(안상훈, 2000), 소득재분배에 대한 국가역할(Edlund, 1999; Lewin-Epstein, et al., 2002)을 복지태도로 측정하고 있다. 이외는 달리, Coughlin(1980)은 사회문제의 원인과 해결, 개인성패의 결정요인, 생활보장방식, 사회정책의 목적, 사회적 약자의 보호여부, 인간관 등을 중심으로 복지친화성(pro-welfare)과 반복지성(anti-welfare)으로

분류하였다. Svallfors(1995)는 스웨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복지제도의 영역별 재정지출, 서비스전달주체의 적합성, 재정부담의 주체, 복지서비스의 남용 등을 중심으로 복지태도를 여러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Andreß and Heien(2001)은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가 복지국가의 기능, 복지국가의 수단, 복지국가의 효과, 복지국가의 재정 등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도, 자료의 한계상 복지국가의 기능으로서 임금격차의 축소, 일자리제공, 기초소득제공에 관한 책임성을 중심으로 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복지태도의 측정에서 보다 진전된 형태로 나타난 연구들을 보면, 먼저, 우아영(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형평성 및 평등성, 복지책임주체,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정부역할, 사회보장제도의 보험료인상, 복지항목별 복지재정, 세금추가징수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복지의식을 측정하고 있으며, 조돈문(2001)의 연구에서는 복지의식을 복지제공의 필요성,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재정의 확대, 복지세금의 증가 등 네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태도의 측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는 복지태도의 구성범주를 단일 차원으로 한정시켜 분석에 활용하거나, 구성범주설정의 논리적 근거와 기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지태도의 다차원적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구성범주와 그 세부 항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복지태도의 구성타당도를 높일 뿐 아니라, 복지태도에 미치는 제반 변수들의 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지태도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복지태도의 구성범주에 대한 질문항목은 자기이해관계와 이타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고 질문수준, 질문의 구체성에 따라 응답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Kangas, 1997), 복지태도의 구성범주와 항목은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결과와 복지이론을 기초로 복지태도를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제도의 선호성, 복지재정의 확충 등 다섯 가지의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복지태도의 구성범주를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설정한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복지태도는 복지기능의 정당화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 복지기능의 정당화는 복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에 기초하여 복지기능의 사회적 효과를 의미한다. 즉, 복지기능의 정당화는 복지기능 및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복지가 나태를 조장하는가 아니면 상호호혜성, 사회문제해결 지향성, 자립조장, 불평등 해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태도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태도는 복지책임의 주체에 대한 인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복지공급주체에 대한 선호여부를 의미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 및 욕구에 대한 대응체계를 제공하는 주된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합주의(collectivism)라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책임과 국가책임이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복지책임주체의 역할분담은 역사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역동적 관계를 보여 왔으며, 개인, 가족, 지역사회, 시장, 국가 등 다양한 주체간의 영역설정을 둘러싸고 이데올로기적 세력화 과정 속에서 줄다리기 경쟁을 벌여왔다. 개인선택의 자유, 경쟁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주

의는 사적 복지책임주의를 강조하지만, 평등, 연대성 등에 기초한 집합주의는 공적 복지책임을 주장하기 때문에,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라는 복지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복지부담의 수용성에 관한 태도이다.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지향과 실천지향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의 적극성 여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에 관한 태도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넷째, 복지원리의 선호성에 대한 태도이다. 복지제공의 보편주의적 원리를 지지하는가 아니면, 선별주의적 원리를 지지하는가 또는 평등지향적 급여제공의 원리를 지지하는가 아니면 소득비례적 급여제공의 원리를 지지하는가에 따라 복지제공의 범위, 복지의 성격과 역할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지원리의 선호성은 복지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복지재정의 확충에 대한 태도이다. 복지재정의 확충여부는 복지지지로 연결되는 실천적인 지향성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재정의 확충에 대한 인식을 복지서비스의 수급대상자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지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재정의 확충에 대한 인식은 복지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영역이라 할 수 있다.

2) 복지태도의 영향요인

복지태도의 결정모델과 관련된 기존 경험적 연구의 이론적 논의는 크게 변수중심적인 접근(variable-based approach)과 이론중심적인 접근(theory-based approach)으로 구분된다. 일부 국내학자들의 연구경향은 변수선정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가 결여된 채, 대개 이론적 근거가 상이하더라도 성, 연령, 교육, 소득 등과 같은 변수중심에 따라 복지태도의 영향력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에, 이론중심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국내학자들의 연구들을 보면, 주된 이론적 관점으로 계급중심논의(김영란, 1995; 우아영, 2000; 조돈문, 2001; 이성균, 2002), 복지권과 복지의무에 따른 복지지위체계논의(안상훈, 2000)를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복지태도의 분석모델은 그 자체로 유용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결국 개인들의 사회적 기반과 복지태도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사회적 지위기반(성, 연령, 계급지위, 복지이해관계) → 복지태도'라는 단선적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모델의 한계는 사회적 지위와는 다르게 사회적 가치와 지향이 어떤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가치지향과 규범에 대한 사회화과정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기반의 일반적 예상과는 상이한 복지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포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복지지위모델에 따르면 복지납세자의 경우 복지재정부담이 가중될수록 국가복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 국가복지에 대한 규범적 순응성(normative compliance) 내지 사회화과정에 따른 가치지향에 따라 개인별 복지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의 기존 분석모델로는 바로 이와 같은 측면을 간과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들의 사회적 지위기반은 국가복지에 대한 규범적 순응성(normative compliance)에 대한 수용정도 및 사회적 가치지향에 따라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입각하여 국가복지에 대한 이중적 태도, 즉 국가복지의 규범적 기능(연대성, 분배정의 등)과 국가복지에 대한 이해관계간의 긴장이 국가복지에 대한 친화성과 수용정도

에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인별 사회적 지위관련변수와 복지태도간의 관계와 함께 가치지향 및 복지의 윤리적 규범과 복지태도간의 관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복지규범 내지 가치지향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앞의 기존 연구뿐만 아니라, 가치가 사고와 행위의 준거틀을 제공한다는 Rokeach(1980)의 가치와 태도간의 위계적 접근,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기이해관계, 가치와 규범, 사회화 패턴의 상이성, 국가별 복지문화로 정리하여 논의한 Andreß and Heien(2001)의 연구, 복지국가의 대중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 결과(Van Oorschot, 1999; Gelissen, 2000; Mau, 2001; Lewin-Epstein, et al., 2002) 등에 기초하고 있다.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은 기존 경험적 연구를 통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로 성변수의 경우,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가족보호부담 등으로 남성보다 복지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복지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Kluegel and Miyano, 1995; Svallfors, 1997). 이는 자기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이나 노동시장진입장벽의 철폐로 인한 노동시장참여의 용이성 등 복지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복지태도 역시 남성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이다(Van Oorschot, 1999). 다음으로 연령변수의 경우 나이가 젊을수록 실업위험성, 저축부족 등으로 복지프로그램에 의존할 것이며, 퇴직노인이나 고령자일수록 복지의존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태도에 있어서도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Kluegel and Miyano, 1995). 또한 Hansenfeld and Rafferty는 평등증진을 위해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책임성에 대해 교육은 간접적 효과를 가지는 반면에 연령과 소득은 복지지도에 대해 직접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Hansenfeld and Rafferty, 1989). 소득수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복지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Van Oorschot, 2002). 그러나 소득수준의 영향은 복지로부터 파생되는 이득이 어떤 계층으로 귀속되느냐에 따라 복지태도의 결정에 상반될 수 있다. 즉, 복지의익의 역진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태도의 영향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지위기반 관련변수중 계급변수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복지태도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언급하고 있으며(조돈문, 2001; 이성균, 2002; Svallfors, 1997), 자본가계급에 비해 노동계급, 중간계급이 복지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복지태도에 대한 계급간 편차를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변수에 의한 복지태도의 설명력보다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회적 지위기반 관련변수는 자기이해관계변수의 영향이다(Gelissen, 2000; Andreß and Heien, 2001; Van Oorschot, 2002). 특히 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 복지서비스제공자라는 지위가 오히려 복지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안상훈, 2000). 복지수급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긍정적인 복지태도를 보일 것이며, 반면에 복지납세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복지부담의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에 대한 지지성향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복지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자기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긍정적인 복지태도를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규범의 순응 및 가치지향관련변수는 Van Oorschot(1999, 2002), Andreß and Heien(2001), Mau(2001), Lewin-Epstein, et al.(2002)의 연구 등을 통해 국가복지에 대한 규범적 순

응성, 분배정의, 사회갈등의 허용도라는 변수로 구체화될 수 있다. 즉,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람직한 사회상에 대한 가치지향으로 복지에 대한 규범적 순응성이 높을수록, 평등주의적 분배정의에 입각할수록, 사회갈등의 허용도가 높을수록 복지친화적 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별 사회적 기반(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복지 지위), 가치와 규범(복지 관련가치의 순응성, 분배정의, 사회화과정에 따른 갈등의 허용도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변수들과 복지친화적 태도간의 관계 또는 복지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복지태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수집방법은 대전시를 중심으로 각 구별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태도 조사설문지’라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이용은 우선 각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협조 및 조사원에 의해 2003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동의 거주 주민 18세 이상 성인남녀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여 회수되었다. 복지태도조사연구에 사용된 표집방법은 다단계 집락표집(multi-stage cluster sampling)과 유의표집이 혼용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집락표집은 확률표집방법으로 모집단을 집락(cluster)이라고 부르는 표집단위로 분류하여 그 집락들 가운데서 표집의 대상이 될 집락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는 추출된 집락에서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본 조사에서는 2003년 9월 현재 대전시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5개구의 각 동이 1차 표집단위(primary sampling unit)로 분류하여 집락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2차표집단위로 각 동에서는 통과 반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집락 즉, 통과 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추출하였으며, 이러한 표본대상의 표집방법은 비확률표집의 일종인 유의표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집방법을 통해 총 350명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350부의 설문지중에서 부실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자료정리와 함께 실제 분석에 유효하게 사용된 설문지는 총 317부였다.

2) 변수구성

이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의 하위영역으로서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원리의 선호성으로 설정하여 각 영역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구조화된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에 포함된 구체적인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이며, 복지이해관계자는 복지납세자, 복지서비스제공자, 복지수급자로 구분하였다. 먼저 성은 남성, 여성으로 이분화된 변수이며,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으며,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업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자료분포의 특성에 따라 고졸이하,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소득수준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으며, 분석방법에 따라 100만원미만, 100만원-200만원미만, 200만원-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복지이해관계자로 복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재범주화한 것이다.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직접적인 서비스 수급여부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서비스 수급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거나 직접적인 근로활동에 따른 세금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복지납세자는 고용주, 자영업주, 피고용자 등으로 구성되었고 복지서비스제공자는 민간복지분야 종사자 및 공공복지분야 종사자로 구성하여 대리변수로 사용되었다.

둘째, 복지규범의 순응 및 가치에 관한 변수로는 사회갈등도, 복지순응성, 분배지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갈등의 허용도는 빈곤과 부유층, 근로자와 고용주, 하위계층과 상위계층, 복지수급자와 세금 내는 사람간의 갈등의 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집단간의 갈등에 관한 4개 집단별 갈등정도를 종합하여 '사회갈등도'라는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변수값은 4점에서 20점의 범위로 사회갈등에 대한 허용도가 높을수록 복지친화적 태도를 가질 것이다. 사회갈등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의 값은 .6964로 척도를 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복지순응성은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 또는 복지와 밀접히 관련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서 바람직한 사회상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복지순응성의 변수값은 4점에서 20점이며, 복지순응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친화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복지규범의 순응성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α 의 값은 .663으로 나타났다. 분배지향성은 소득과 재산의 평등분배에 대한 단일질문으로 5점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분배지향성이 강할수록 복지태도의 친화성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셋째, 복지태도는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재정의 확충여부라는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복지기능의 정당성은 근로동기저하여부, 상호호혜성 등 복지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6문항을 중심으로 5점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변수값은 6점에서 30점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의 값은 .7197로 나타났다.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은 복지충당을 위한 세금인상, 보험료인상 등 5문항을 중심으로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의 변수값은 5점에서 25점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의 값은 .826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지원리의 선호성은 복지제공의 보편성 정도와 급여제공의 평등성 정도라는 2문항을 중심으로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복지원리의 선호성은 2점에서 10점의 범위로 중앙값 6점을 기준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제도적 복지원리, 그 반대의 경우를 잔여적 복지원리를 선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복지원리의 선호성에 대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의 값은 .6188로 신뢰도가 낮지만 척도로 사용하였다. 복지공급의 책임성은 복지책임주체를 개인책임과 국

가책임의 연속선상으로 파악하여 자신=1, 가족과 친척=2, 이웃=3, 지역사회=4, 정부=5점을 부여하여 5점척도로 간주하였으며, 가난한 사람, 실업자, 질병자,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7 문항에 대한 복지책임주체를 종합한 척도이다. 복지공급의 책임성이라는 변수값은 7점에서 35점까지로 구성되며,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의 값은 .8001로 나타났다. 복지재정의 확충은 7문항으로 복지서비스대상자별(가난한 사람, 실업자, 질병자,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복지확대의 필요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하였으며, 7점에서 35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친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복지재정의 확충에 대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의 값은 .893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복지기능의 정당성(6문항),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5문항), 복지원리의 선호성(2문항), 복지공급의 책임성(7문항), 복지재정의 확충(7문항)을 합산하여 생성한 변수가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이며, 27점에서 135점의 범위를 갖고 있다. 복지태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의 값은 .8435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 1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자료의 일반적 특성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복지태도의 차이 또는 분화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과 복지태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복지이해관계자의 분포

복지태도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복지이해관계자로서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표 1>을 통해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성이 52.7%, 여성 47.3%로 나타나 비교적 동일하다.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3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가 30.0%, 20대가 25.9%, 50대 이상이 10.4%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자 317명의 평균연령은 36.69세로,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의 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자 317명중 73.5%가 대졸자이고, 고졸은 22.1%, 중졸이하가 4.4%로 나타나, 응답자의 학력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이

약 37세임을 고려하면, 고학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수준은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이 176만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3.9%,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31.9%,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26.2%, 300만원 이상이 18.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50대 이상의 연령이 과소표집되었고, 고학력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 만족할만한 표집과정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과정 등 표집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복지이해관계자의 분포

(단위: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계
성	남 성	167	52.7	317(100.0)
	여 성	150	47.3	
연 령	20대 (29세 이하)	82	25.9	
	30대 (30-39세 이하)	107	33.8	
	40대 (40-49세 이하)	95	30.0	
	50대이상(50세 이상)	33	10.4	
	평균연령(세)	36.69		
교육수준	중졸이하	14	4.4	
	고졸이하	70	22.1	
	대졸이상	233	73.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76	23.9	
	100만원-200만원 미만	101	31.9	
	200만원-300만원 미만	83	26.2	
	300만원 이상	57	18.0	
	평균소득(만원)	176.23		
복지이해관계자	복지납세자	205	64.7	
	복지수급자	55	17.4	
	복지제공자	57	18.0	

한편, 복지이해관계자를 복지납세자, 복지수급자, 복지제공자로 구분하였다. 복지납세자는 고용지위를 통해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주, 자영업자, 피용자로 구성되며, 복지수급자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의미한다. 복지제공자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물론 복지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당연히 수급자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직접적인 서비스 수급 여부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서비스 수급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직접적인 근로활동에 따른 세금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복지납세자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세금납부를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표 1>에서 보면, 조사대상자의 317명중 복지납세자는 64.7%, 복지수급자 17.4%, 복지제공자 18.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복지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자중 복지납세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2) 복지규범의 순응 및 가치, 복지태도의 경향성

조사대상자의 응답결과를 중심으로 사회갈등도, 복지순응성, 분배지향성이라는 복지규범의 순응 및 가치와 복지태도의 단순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다.

우선, 사회갈등도는 5점척도로 이루어진 4문항의 총합점수로서 사회갈등도의 평균점수는 16.78점으로 5점척도로 환산할 경우에 4.19로서 사회집단간의 갈등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며,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복지노력이 배가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리고 복지순응성은 5점척도로 이루어진 4문항의 총합점수로서 평균값은 16.24점(5점척도로 환산할 경우 4.06)으로 나타나 복지이미지 및 복지관련 가치에 대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배지향성은 5점척도로 이루어진 단일문항으로서 평균값은 2.34점으로 평등 지향적 이라기보다는 개인성과를 중시하는 업적주의적인 특징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복지규범의 순응 및 가치, 복지태도의 단순 기술통계치

변수명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
사회갈등도	5-20	16.78	2.31	9	20	317
복지순응성	5-20	16.24	2.71	8	20	
분배지향성	1-5	2.34	1.15	1	5	
복지태도	27-135	98.87	14.39	61	135	
복지기능의 정당성	6-30	20.95	4.00	11	30	
복지부담의 수용성	5-25	17.21	4.25	5	25	
복지원리의 선호성	2-10	7.98	1.88	2	10	
복지공급의 책임성	7-35	24.21	7.65	7	35	
복지재정의 확충	7-35	28.52	4.82	7	35	

다음으로 복지태도의 평균점수는 98.87점으로(5점척도로 환산할 경우 3.66) 복지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복지에 대해 지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복지태도의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를 5점척도로 환산하여 보면, 복지기능의 정당성이 3.49, 복지부담의 수용성 3.44, 복지원리의 선호성 3.99, 복지공급의 책임성 3.46, 복지재정의 확충 4.07로 나타나 복지태도의 하위영역별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의 사회적 효과, 복지비용부담의 자발성, 복지공급의 책임주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복지원리 및 복지재정의 확충보다는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원리로서 적용대상의 보편성과 급여방식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복지재정의 확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복지이해관계자별 복지태도의 차이분석

복지에 대한 정치적 지지 또는 복지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선호여부는 복지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에 따라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복지태도와 그 하위 구성범주인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공급의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복지원리의 선호성, 복지재정의 확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복지태도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복지이해관계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또는 이러한 특성에 의해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표 3>은 복지태도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복지이해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로서, 성변수를 제외하고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복지태도에서 긍정적이며, 연령변수 중에서는 30대가 복지친화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수급자에 비해 복지납세자나 복지제공자의 태도가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복지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정반대의 결과로서 복지로부터 파생되는 기대이득에 따라 복지태도의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복지수급자보다 복지납세자의 친복지적 태도는 기존 논의(Sihvo and Uusitalo, 1995; Andreß and Heien, 2001에서 재인용)의 내용과는 다른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복지수급자가 복지국가의 지지정도나 복지친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납세자의 친복지적 태도의 약화에 대한 Andreß and Heien(2001)의 논의에 따르면, 복지 납세자로서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수급자 지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복지급여수준의 적절성 및 충분성 문제 또는 복지수준에 따른 조세갈등 등과 같은 물질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3> 복지태도에 대한 집단간 평균차이(N=317)

구 분		사례수 (N)	평균 (M)	표준편차(SD)	t / F
성	남성	167	99.34	14.69	.61
	여성	150	98.35	14.06	
교육수준	고졸이하	84	95.35	15.79	-2.64**
	대졸이상	233	100.14	13.66	
연 령	20대	82	95.76	13.73	3.36*
	30대	107	102.15	13.78	
	40대	95	98.37	15.15	
	50대이상	33	97.39	14.1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76	94.92	14.66	2.29*
	100만원-200만원 미만	101	99.07	12.09	
	200만원-300만원 미만	83	100.55	16.56	
	300만원이상	57	101.35	13.60	
복지이해 관계	복지납세자	205	99.55	14.78	6.70**
	복지수급자	55	92.90	13.79	
	복지제공자	57	102.19	11.82	

*p<0.05, **p<0.01

다음으로 복지태도의 하위영역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복지이해관계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가 <표 4>이며, 분석결과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기능의 정당성에 대해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뿐 다른 변수들에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평균차이를 보면, 공동체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세대로 평가받고 있는 30대의 경우가 가장 높게 복지기능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복지이해관계자에 따라 복지기능의 정당성에 대한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복지기능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와 복지의 실천의지간의 관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구체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복지기능의 정당성은 복지의 이해관계기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보다는 실천행위나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복지태도가 상이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복지부담의 수용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교육수준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수급자에 비해 복지제공자나 복지납세자가 비용부담의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최균·류진석, 2000)와는 대조적으로 비용부담의 수용성이 높은 결과는 표본의 편의문제이거나 아니면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 복지태도의 하위영역별 집단간 평균차이(N=317)

구 분		사례수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재정의 확충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성	남성	167	21.04	.43	17.71	2.25*	7.94	-.31	24.27	.14	28.36	-.60
	여성	150	20.84		16.65		8.01		24.14		28.69	
교육 수준	고졸이하	84	20.84	-.27	16.90	-.77	7.79	-.92	22.32	-2.46**	27.48	-2.03*
	대졸이상	233	20.98		17.32		8.04		24.98		28.89	
연령	20대	82	20.19	2.11*	15.91	4.51*	7.51	4.45*	23.98	2.66*	28.15	.98
	30대	107	21.60		17.16		8.40		25.81		29.16	
	40대	95	21.02		18.03		8.07		23.08		28.16	
	50대이상	33	20.48		18.24		7.48		22.84		28.33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76	20.82	.75	15.30	9.04**	7.36	3.59*	23.21	1.03	28.21	.95
	100만원-200만원미만	101	20.55		17.21		8.16		24.82		28.31	
	200만원-300만원미만	83	21.19		17.87		8.20		24.89		28.38	
	300만원이상	57	21.45		18.78		8.12		23.49		29.49	
복지 이해 관계	복지납세자	205	21.01	1.34	17.32	3.92*	8.00	5.53*	24.44	3.19*	28.77	1.75
	복지수급자	55	20.21		15.90		7.34		22.01		27.41	
	복지제공자	57	21.42		18.08		8.50		25.49		28.68	

*p<0.05, **p<0.01

셋째, 복지수급대상의 범위로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원리에 기초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적 원리에 기초할 것인가에 따라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복지급여방식으로서 소득비례적인 급여방식, 즉 지위나 업적에 기초한 급여제공형태를 선호하는가 아니면 평등주의적인 급여제공형태를 선호하는가에 따라 복지의 태도는 상이할 수 있다. 복지원리의 선호성을 보면, 성과 교육수준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령의 경우 30대가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고, 소득이 낮은 100만원미만 집단보다 소득이 높은 집단이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복지이해관계자에 따라 복지원리의 선호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복지공급의 책임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 소득수준에 따라 복지공급의 책임성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책임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복지공급의 책임성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국가책임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복지이해관계자에 따라 복지공급의 책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제공자집단과 복지수급자집단간 평균차이를 보더라도 복지제공자집단이 더 국가책임지향적이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복지실현에 있어서 복지재정은 실질적인 급여수준 및 제도운용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빈곤층, 실업자, 질병자,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등 복지수급대상자별로 복지재정을 증가해야 하는가, 아니면 감소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복지재정의 확충정도에 대한 차이를 보면, 성, 연령, 소득수준, 복지이해관계자는 복지재정확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고졸집단보다 대졸집단이 복지재정확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복지태도의 하위영역별로 연령 및 복지이해관계자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적 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Andreß and Heien, 2001; Van Oorschot, 2002)에서 논의된 내용과 일치한 것으로, 연령과 복지지위에 따른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태도의 하위영역별 친복지적 태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중 30대의 강한 복지친화적 태도는 공동체적 가치를 학습한 세대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복지규범의 순응 및 가치와 복지태도간의 관계

복지태도는 사회적 가치의 반영이라고 하듯이, 복지와 관련하여 어떤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있는가는 복지태도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치차원을 크게 개인주의적 가치관, 집합주의적 가치관으로 대별할 경우, 전자의 경우는 호혜성에 입각한 원조행위보다는 개인책임의 노동윤리(work ethics)를 강조한 반면에, 후자의 집합주의적 가치관은 상호 호혜성 또는 공동체주의(communalism)에 입각한 원조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복지규범과 가치지향과 관련하여 사회집단간의 갈등에 대한 인

식, 복지에 대한 순응성 정도 및 분배지향성에 대한 인식과 복지태도간의 관계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복지규범의 순응 및 가치지향과 복지태도간의 상관관계(N=317)

구 분	복지태도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재정의 확충
사회갈등도	.161**	.104	-.047	.019	.136*	.214**
복지순응성	.490**	.367**	.344**	.260**	.275**	.316**
분배지향성	.132*	.104	.067	.011	.123*	.049

*p<0.05, ** p<0.01

복지규범의 순응 및 가치지향관련변수로서 사회갈등도와 복지순응성, 분배지향성은 복지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에서도 복지와 밀접히 관련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서 바람직한 사회상에 관한 복지순응성은 친복지적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예측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복지친화적 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복지이미지 및 관련 가치에 대한 사회화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복지태도의 하위영역별간의 관계를 보면,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복지공급의 국가책임지향성과 복지재정의 적극적 확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복지순응성은 각 하위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등주의적 분배지향성은 복지공급의 책임성에만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복지태도의 영향요인

복지태도는 사회적 지위기반으로 언급되는 개인적 특성과 복지지위모형에 기초한 복지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복지지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의해 학습될 경우 복지태도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여기에서는 복지태도의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지위변수와 복지규범 및 가치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던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 복지이해관계자,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복지태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¹⁾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모델 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복지이해관계 변수는 복지태도의 변량을 5.8%를 설명하고 있다. 성, 연령, 소득수준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으로서 성별 분화를 논의하는 기존 연구(Kluegel and Miyano, 1995; Svallfors, 1997; Van Oorschot, 1999)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복지친화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 대한 복지서

1) 회귀분석모델에 투입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공선성 진단(VIF와 Tolerance)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분석결과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유발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스의 수준이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내용으로 체감하지 못한 것에 기인할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가족중심문화에서 여전히 여성 중심적이며 여성을 노동시장의 참여로 유인할 복지조치가 가시적이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반면에 교육년수와 복지이해관계변수로서 복지납세자와 복지제공자는 복지수급자에 비해 친복지적 태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교육변수는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도와 부적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한 Kluegel and Miyano(1995)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서, 자기이해관계에 대한 특정관점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복지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복지이해관계를 나타내는 복지지위변수의 영향력의 결과를 보면, 복지수급자에 비해 복지납세자나 복지제공자가 복지태도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제공자가 친복지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복지수급자에 비해 복지납세자가 복지태도의 긍정적인 분석결과는 기존 논의(Sihvo and Uusitalo, 1995; Andreß and Heien, 2001에서 재인용; Pettersen, 2001)에서 언급한 내용과는 다른 결과로서, 복지급여수준의 체감정도가 낮거나 조세인상 및 복지비용 증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물질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6> 복지태도에 대한 회귀분석(N=317)

구 분	모델1		모델2		모델2	
	B	Beta	B	Beta	B	Beta
개인특성						
성	-.393	-.014			.518	.018
연령	.147	.098			6.882E-02.235	.046
교육년수	.565*	.108			1.319E-03	.045
소득수준	2.738E-03	.023				.011
복지이해관계						
복지납세자	4.892**	.163			3.517	.117
복지제공자	7.632**	.204			4.625*	.124
복지규범 및 가치						
사회갈등도			.240	.038	.247	.040
복지순응성			2.508***	.473	2.341***	.442
분배지향성			1.044*	.083	1.151*	.092
상수(constant)	80.358***		51.684***		44.437***	
R-square	.058		.249		.268	
F값	3.186***		34.595***		12.467	

주 1) 성과 복지이해관계는 더미변수임
 (성: 남성 1, 여성 0, 복지이해관계자는 복지수급자가 기준변수임)
 *p<0.1, **p<0.05, ***p<0.01

모델 2는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관련 변수가 복지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가를 분석한 모델이다. 모델2의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관련 변수가 복지태도의 변량을

24.9%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복지이해관계 변수들의 설명력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으로서 복지규범 및 가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 2에 투입된 하위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회갈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순응성과 분배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복지순응성이 높을수록, 평등주의적 분배가치지향일수록 복지태도는 친복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복지국가의 지지수준은 분배지향성 및 복지관련 가치지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Lewin-Epstein et al.(2002)의 연구와 일치한 것으로서, 복지태도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바람직한 사회상 및 가치지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모델3은 모델1과 모델2에 사용된 독립변수를 모두 투입한 분석모델을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모델3의 독립변수가 복지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26.8%이다. 모델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교육년수와 복지납세자는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 관련변수를 통제할 경우에는 변수의 효과가 사라진다. 반면에 복지제공자만이 복지수급자에 비해 친복지태도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관련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사회갈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복지순응도 및 분배지향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복지이해관계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여전히 복지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변수임을 알 수 있다.

모델 3에 제시된 회귀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복지태도의 결정모델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태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변수는 복지순응성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 지위변수가 복지태도를 결정한다는 단선론적 분석모델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복지이해관계 변수 중 복지제공자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위기반이 다를 수 있어도 복지이미지, 복지규범에 대한 일반적 인식수준 또는 국가복지에 대한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가치지향이나 복지규범의 순응성에 따라 복지태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점은 한편으로는 조사자료의 한계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태도에 있어서 친화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 복지확대를 도덕적 정당화로 보고 있어, 이를 부정할 만한 뚜렷한 대립적 기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태도를 구성하는 범주가 규범적인 차원 및 인식적 차원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친화적 태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에 기인할 수 있다. 만약, 구체적인 정책내용이나 서비스가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기반과 심각하게 상충될 경우 또는 복지의 실천행위와 관련될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낳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셋째, 복지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계급변수의 효과는 자료의 한계상 살펴보지 못하였지만 이를 대리할 수 있는 소득수준과 복지태도간의 관계를 보면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계급에 의해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국내의 기존연구(조돈문, 2001; 이성균, 2002)와는 다른 연구결과로서 계급중심의 분화가능성보다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된 가치나 복지규범이 오히려 복지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5. 결 론

복지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복지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지향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복지태도에 관한 실증연구는 복지의 정당성을 이루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의 구성범주를 설정하고, 복지태도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복지태도간의 관계,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과 복지태도간의 관계 등을 기초로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복지태도의 결정구조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태도의 구성범주를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결과에서는 복지태도의 구성범주를 복지책임주체나 소득재분배에 대한 국가의 역할, 복지제공의 필요성, 복지재정의 확대, 복지세금의 증가 등을 중심으로 단일차원 내지 몇 가지 영역으로 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복지기능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으로서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공급주체의 선호여부, 복지실천행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복지비용부담의 수용가능성, 복지의 제공범위와 급여제공방식에 대한 인식으로서 복지원리의 선호성, 복지재정의 확충을 중요한 하위 구성범주로 설정하여 복지태도를 조작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둘째, 복지태도의 결정모델과 관련하여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변수를 보완하여 설정하였다. 기존의 복지태도에 관한 결정모델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예컨대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또는 계급중심의 사회적 지위기반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복지지위모형에 기초하여 복지에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태도의 결정모델은 사회적 지위기반 또는 복지지위에 의한 단선론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학습되거나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복지에 대한 가치와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상이한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복지태도에서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거나 아니면 유사한 사회적 지위기반하에서도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에 따라 복지태도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빈곤에 대한 개인주의적 원인을 강조한다고 해서 복지태도에 있어서는 반복 지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 및 복지지위 변수,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 관련 변수 등을 통합한 모델이 복지태도를 설명하는데 보다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복지규범 및 가치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사회갈등정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수준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사회통합이 중요한 관건임을 알 수 있다. 조사응답자의 대부분이 복지규범의 순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분배지향성과 관련해서는 평등주의적 분배정의보다는 업적주의적 분배정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복지태도의 하위영역, 즉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복

지공급의 책임성, 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다섯 가지 영역에서 복지태도는 복지에 대해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분석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전체 복지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기능의 정당성에서는 다른 하위영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지정도가 낮게 나타나 비용부담의 자발성, 복지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 점은 앞으로의 복지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나 정치적 역학관계에 측면에서 대립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섯째, 복지태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복지이해관계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성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복지태도의 하위영역별 친복지적 태도는 연령, 복지이해관계자별로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연령중 30대의 강한 복지친화적 태도는 공동체적 가치를 학습한 세대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태도의 결정모델에 대한 분석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은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복지규범 및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서구복지국가의 대중적 지지와 복지흐름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균열명제(cleavages thesis)'의 현실적합성이 유효하지 않은 이유는 복지기능의 도덕적 의무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지위기반의 영향력보다 우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사회에서 복지제도를 둘러싼 자기이해관계(self-interests)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결과 또는 복지정치의 제도적 기반약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성, 계급, 복지이해관계 등 지위기반 변수에 의한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은 복지비용부담과 급여수준간의 격차, 구체적인 정책내용이나 서비스가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기반과 심각하게 상충될 경우 또는 복지의 실천행위와 관련될 경우에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 문헌

- 김상균·정원오, 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5: 1-33.
- 김영란, 199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계급 및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상훈, 2000. "복지정치의 메커니즘과 비계급적 균열구조: 복지권과 복지의무에 기초한 세 가지 지위차원의 이론적·경험적 검토". 한국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연구』 16: 87-115.
- 안치민, 1995.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고려사회학논집』 9: 211-228.
- 우아영, 2000. "복지의식에 관한 사회계급간 비교연구". 가톨릭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 이성균, 2002.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2): 205-228.
- 이인재, 1998. "IMF관리체제이후 한국인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 12: 85-110.
- 조돈문, 2001.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효과". 『산업노동연구』 7(1): 157-191.
- 최균·류진석, 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사회복지연구』 16: 223-254.

- Andreß, Hans-Jürgen and T. 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4): 337-356.
- Coughlin, R. M. 1980. *Ideology, Public Opinion and Welfare Policy: Attitudes towards Taxing and Spending in Industrialized Societies*. Berkel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 of California.
- Edlund, J. 1999. "Attitudes to Income Redistribution and Taxation in Social Democratic and Liberal Welfare State Regimes: A Comparison Between Sweden,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In N. Tos et al.. *Modern Society and Values*. Ljubljana: Univ. of Ljubljana.
- Gelissen, J. 2000. "Popular Support for Institutionalised Solidarity: A Comparison between European Welfare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9: 285-300.
- Hansenfeld, Y. and J. A. Rafferty. 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 1027-1048.
- Johnson, N. 1987. *The Welfare State in Transi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Welfare Pluralism*.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Kangs, Olli E. 1997. "Self-Interest and the Common Good: The Impact of Norms, Selfishness and Context in Social Policy Opinions". *Journal of Socio-Economics* 26(5): 475-494.
- Lewin-Epstein, N. et al. 2002. "Distributive Justice and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 Kluegel, J. R. and M. Miyano. 1995. "Justice Beliefs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in Advanced Capitalism". In J.R. Kluegel et al.. *Social Justice and Political Change: Public Opinion in Capitalist and Post-Communist Stat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Mau, S. 2001. "Patterns of Popular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A Comparison of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Berlin.
- Pettersen, P. A. 2001. "Welfare State Legitimacy: Ranking, Rating, Paying-The Popularity and Support for Norwegian Welfare Programmes in the Mid 1990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4(1): 27-49.
- Rokeach, M. 1980. "The Nature of Attitudes". *IESS*.
- Svallfors, S. 1995.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Acta Sociologica* 38: 53-74.
- Svallfors, S. 1997.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2): 283-304.
- Taylor-Gooby, P. 1985. "Attitudes to Welfare". *Journal of Social Policy* 14(1): 73-81.
- Van Oordchot, W. 1999. "The Legitimacy of Welfare: A Sociological Analysis of Motives for Contributing to Welfare Schemes".
- Van Oordchot, W. 2002. "Individual motives for contributing to welfare benefits in the Netherlands". *Policy & Politics* 30(1): 31-46.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Ryu, Jin-Seok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in Korea. Based on Survey data, this study focuses mainly on how social-economic position variables, welfare status and welfare compliances influence attitudes towards welfare. Welfare attitudes can be classified by five areas as follows: legitimacy of welfare functions, affordability of welfare costs, need-based welfare principles, responsibility of welfare provision and adequacy of welfare spending.

There are the major findings. First, attitudes towards welfare is identified state-friendly or pro-welfare attitudes. Second, among the social-economic position variables, welfare status and welfare norms variables, welfare compliance has statistically the most significant effects on welfare attitudes. Third, the level of pro-welfare attitudes is largely determined by welfare norms and images espoused by individua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e can not apply cleavages thesis which are developed by studies on the support for welfare state.

Key words: welfare attitudes, social-economic positions, welfare interests, welfare compliance

[접수일 2004. 7. 20. 게재확정일 2004. 10. 17.]